‘20대 국회’ 호남 중진에 듣는다 ⑤김동철(국민의당·광주 광산갑)

“정국주도 제3의 길 제시할 것”

손학규 전 대표는 야권 자산
정계복귀 환경 만들어줘야

정치권이 앞장서 민심 결집
호남 주도 정권교체 이뤄야

김동철(광산 갑) 의원이 4선 고지를 넘었다. 광주 지역구 의원으로는 최초다. 천정배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각기 6선과 4선 고지를 넘어섰지만 그들은 경기도(안산)와 전남(보성·화순)에서 각기 국회의원을 지냈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바람에 힘입어 지난 17대 국회에 진입한 김 의원은 내리 3선에 성공했으며 국민의당 녹색 바람은 그의 4선에 날개를 달아줬다. 탄풍(탄핵 바람)으로 17대 국회에 함께 진입했던 광주지역 의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그가 유일하며 산자위원장과 국토위원장 등 국회 핵심 상임위원장을 두 차례나 지냈다. 하지만, 당 대표 및 원내대표 경선 등 당내 선출직 선거에서는 쓴 맛을 보기도 했다. ‘버럭 동철’이라는 그의 별명이 말해주듯이 할 말은 하는 성격이어서 정치적 외연을 넓히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더민주를 탈당하기 전에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등 비주류 의원 모임을 주도하며 당내 패권주의에 정면으로 맞서기도 했다. 그가 이러한 정치적 경험 등을 살려 차기 정권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도부 구성 문제가 당내 이슈다.

▲원칙적으로 전대를 치러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당원과 대의원, 지역위원회 등이 미비하고 자칫 20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둔 정치적 골든 타임에 갈등이 분출될 우려가 있다. 올해 말까지 전대 연기 주장은 양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당권과 대권 분리 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원내대표에 출마할 것인가.

▲안철수 대표 측에서 합의 추대 등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20대 국회 초반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대연기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공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할 말은 많지만 창당 주역으로 참겠다. 국민적 지지가 결집되는 국면에서 갈등을 촉발시키고 싶지 않다.

–국회의장 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대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3당이 20대 국회 4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포인트다. 국민을 위한 정치·정당·국회 개혁과 민생과 경제, 남북관계 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이 같은 흐름을 주도하며 함께 나서는 정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지지하면 된다. 국민의당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원 구성,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서도 플러스 알파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국회의장 문제가 국민의당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느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분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대선 전에 정계 복귀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계 은퇴 선언을 한 손학규 전 대표로서는 약속을 번복한다는 점에서 정계 복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손 전 대표는 야권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야권이 나서 정계복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호남 대표론과 관련, 호남 자민련으로 입지가 좁아진다는 지적이 있다.

▲전형적인 호남 차별 프레임이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자질과 능력이 중요하지 정치공학적인 판단은 전혀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호남 정치권이 가야할 길은.

▲정권교체를 위해 호남 민심이 결집할 수 있도록 호남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이를 통해 호남이 주도하는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 호남 민심이 20대 총선을 통해 야권 재편을 이뤄낸 것을 바탕으로 야권 전체에 강력한 경쟁을 유도, 체질 개선을 통해 수권 세력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호남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만들었지만 정작 별다른 미래 먹거리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 차기 정권을 창출한다면 호남의 먹고 사는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국민의당 정권 창출의 방정식은.

▲국민의당은 3당 구도에서 경쟁을 통한 단독 정권 창출을 모색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야권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총선 민심에 반하는 것이다. 야권 통합의 전제 조건은 더민주의 변화와 혁신이다. 진솔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야권 통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후보단일화도 마찬가지다. 더민주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또 후보 단일화 합의에는 연립 정부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의당에 요구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영입,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구조개혁 등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위기의 남북관계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를 넘나드는 것을 넘어 제3의 길을 제시하며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

–20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예결위 상설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다. 예결위 상설화는 여당에서 반대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상임위에서 예산 검토한다고 해도 하루 이틀에 불과하다. 기재부 과장이나 국장보다 못하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틀을 개혁해야 한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국가 운영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의회 하반기 의장선거 혼전 예고

광주 더민주 13·국민의당 8명, 전남 더민주 30·국민의당 24명 등 구성

제7대 광주시의회와 제10대 전남도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는 입지자들의 난립과 기존에 보기 드문 양당구도로 혼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7월 8일 임시회에서 의장과 제1·2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도 같은 날 이뤄진다. 같은 달 14일 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4명을, 20일에는 운영위원장을 뽑고 하반기 원 구성을 마친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의장 후보로는 재선 의원 대부분이 물망에 오른다. 전반기 조영표 의장을 빼면 재선은 조오섭·문상필·김민종·김보현·김영남 의원 등 더민주 소속 5명, 국민의당 소속은 이은방 의원 1명이다.

의회의 대외 위상을 고려해 재선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 속에 초선 의원도 복병으로 도사리고 있다.

전반기 제2 부의장이었던 김동찬(더민주) 의원 등 일부 초선도 도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구성이 더민주 13명, 국민의당 8명으로 양분돼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에 광주 8개 선거구를 모두 내준 더민주가 의장직 확보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의석수에 따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나누는 국회식 배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장 선거결과는 당리당략 외에도 의원 개인 간 친소관계나 부의장·상임위원장 조합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민의당 의원이 수적열세를 극복할 여지도 있다.

제10대 전남도의회 하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도 마찬가지다.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난 4·13 총선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재편되면서 정당 간 대결이 될지 주목된다.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는 더민주 이용재, 국민의당 임명규 의원이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재선 의원으로 임 의원은 2년 전 전반기 의장 선거때 출마해 명현관 의장에게 졌고, 이 의원은 명 의장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그동안 이용재 의원은 주류, 임명규 의원은 비주류로 분류됐다.

도의회는 현재 더민주 30명, 국민의당 24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당 대결보다는 친소관계,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라인업 구성 등이 의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명을 뽑는 부의장 후보로는 더민주 송현곤, 이장석 의원과 국민의당 서정한, 권욱, 김효남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7명을 뽑는 상임위원장 후보는 주로 초선 의원들이 의장·부의장 후보와 ‘짝짓기’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바마, 캐머린 영국 총리와 골프

골프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공식 영국 방문기간인 23일(현지시간) 런던 북부 더그로브 리조트 경내 골프장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골프를 즐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중 지금까지 모두 286번의 골프경기에 나섰지만 해외 공식방문 길에 골프를 친 것은 처음인데 영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의 해석이다. /연합뉴스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책 촉구

강정희 도의원 도정질문

강정희 전남도의회 의원(여수, 비례) 은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간 형평성 문제 제기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도가 지난 2013년 최초 도입한 중증장애인 전남도 추가사업 시·군 매칭 비율 50%를 2015년에 70%로 아무런 행정협의 없이 높인 것은 잘못됐다”며 시정을 촉구한 뒤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여수지부가 지난 수년간 보조금 부실 정산, 부당 수령 등을 해왔으나 사후 후속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시·군 부담률을 높인 사유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보조금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예산 반영을

김옥기 도의원 도정질문

김옥기 전남도의원(나주2)은 지난 20일과 21일 도정질의에서 전라남도가 부담해야할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적립과 학교용지부담금을 규정대로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전남도와 21개 시·군(완도 제외)이 법으로 정해진 만큼 퇴직급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전남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승종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남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전남도가 전남도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지난해 기준으로 33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당해년도에 발생되는 부담금은 그 해에 전출하고 미전출금에 대해서는 매년 30억원씩 별도로 부담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